

한·미 FTA청문회 쟁점과 각 당 전략

與 “임시국회 처리” 野 “美 쇠고기 연계”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13~14일 열리는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한·미FTA청문회에서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민주당 등 야 3당은 쇠고기 재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17대 국회에서 한·미FTA 비준안을 처리하는 것은 불가하다며 재협상과 비준안을 연계하는 전략으로 정부를 압박할 태세다. 반면, 한나라당은 야당의 태도를 정치적 공세로 규정하고 이번 임시국회 내에 비준안을 처리하는데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한나라당=한·미FTA 청문회가 ‘쇠고기협상 청문회’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데 주력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한·미FTA 비준 동의가 17대 국회 임기를 넘겨 18대 국회로 넘어갈 경우 막대한 시간적 비용과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한나라 “FTA는 우리당·참여정부가 추진” 민주당, 쇠고기 재협상·수입 고시 연기 촉구

청문회를 하루 앞둔 11일 한나라당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유영환 외교통상부 장관 등을 국회 당정 협의에 참석시킨 뒤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청문회를 통해 야당이 쇠고기 문제를 또 다시 꺼내들지 않도록 큰 틀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이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전체적으로 FTA 관련, 지난해 6월에 합의돼 국민이 그 내용을 알고 잘 모를 수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FTA는 통합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가 추진해 주력했던 점을 부각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청문회가 끝나면 FTA법을 법안소위로 넘길

예정이나 김원웅 통의통위 위원장이 통상절차법과 남북 총리회담 비준동의안을 연계 처리한다는 방침 아래 비준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거듭 협조를 요청해 나갈 계획이다.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김원웅 위원장과 직접 통화해서 FTA를 꼭 통과시켜 달라고 당부했고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통의통위에서는 꼭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또 민주당이 청문회를 목전에 두고 FTA에 우호적인 통의통위 소속 위원들을 절반이상 대거 교체한 일에 대해 비난하고 민주당의 정략성을 집중 부각시켜 낸다는

전략이다. ◇통합민주당=이번 청문회를 쇠고기 재협상의 필요성을 규명하는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목표 아래 협상 과정의 문제점을 적극 파헤치기로 했다. 민주당은 특히 통의통위 위원 6명을 FTA 비준에 비판적인 의견을 가진 의원들로 대거 교체, 정부에 대해 격렬한 공격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일차적으로 정부 측에 15일로 예정된 새 수입조건 고시를 늦출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또 쇠고기 협상 결과가 국민의 소비 후생이나 건강권을 증진하는 농수산물품부보다는 한미동맹에 집착한 외교통상부의 정치적 입김에 작용한대 따른 것 아니냐는 점도 추궁한다는 방침

이다. 민주당 간사인 이화영 의원은 “쇠고기 협상이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조공용 협상의 결과였다는 점을 분명히 말할 것”이라며 “이런 맥락에서 외교부가 농수산물품을 압박한 것은 없는지, 외교부가 사실상 협상을 주도한 것 아닌지를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선진당, 민노당=민주노동당은 통의통위원인 권영길 의원을 통해 쇠고기 협상의 법적인 문제점을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박승훈 대변인은 “FTA청문회를 쇠고기 문제 중심권을 가진 의원들로 대거 교체, 정부에 대해 격렬한 공격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일차적으로 정부 측에 15일로 예정된 새 수입조건 고시를 늦출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또 쇠고기 협상 결과가 국민의 소비 후생이 나 건강권을 증진하는 농수산물품부보다는 한미동맹에 집착한 외교통상부의 정치적 입김에 작용한대 따른 것 아니냐는 점도 추궁한다는 방침

이다. 통의통위원이 없는 자유선진당은 13일 워크숍을 갖고 쇠고기 위한 소송, 국정조사 발의, 정문천 농수산식품부 장관 해임 건의안 제출에 대한 자당 의원들의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또 비현실적 정책...

‘장병 식탁 한우로만’ 하루만에 번복 부족분 오리고기로 대체 ... 논란 가중

군 장병 식단에 수입 쇠고기를 없애겠다(본보 12일자 2면)고 했던 정부가 쇠고기 살코기 급식량을 장병 1인당 하루기준 35g(외국산 20g 포함)에서 국내산 15g만을 제공할 계획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12일 ‘입장자료’를 통해 “쇠고기 살코기 급식량은 장병 1인당 1일 기준 국내산 15g, 외국산 20g이었으나 7월 말까지 수입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8월 1일부터는 국내산 15g만 급식기로 했다”고 밝혔다.

호주와 뉴질랜드산 쇠고기 살코기를 중단키로 함에 따라 8월 1일부터 외국산 20g은 식단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군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로 기존에 식탁에 올랐던 살코기 20g을 지급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장병 고기 급식량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예산 사정으로 살코기 20g을 구입할 수 없다”면서 “대신 피리곰

탕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열량 면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외국산 살코기 20g은 오리고기 등으로 보충할 계획이어서 영양 측면에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국내 축산업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국방부의 설명도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국내 축산농가를 위해서는 식단에서 사라지는 외국산 20g을 국내산 살코기로 대체 구입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농가 보호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지적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장병 1인당 하루 500g, 연간 18회씩 제공되는 피리곰탕의 50%를 국내산으로 충당하기로 해 국내 축산업계에 도움이 된다”며 “연간 40억원이 국내산 피리곰탕을 구입하는 데 사용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현지 점검단 출국 손준준(앞줄 왼쪽)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 검사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미 쇠고기 특별점검단 일행 9명이 1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점검단은 25일까지 미국에 머물면서 한국 수출용 쇠고기 생산 도축장의 위생 시스템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57개 대학생 단체 ‘美 쇠고기 반대’ 시국 결의

전남대 등 전국 30개 대학 총학생회를 비롯한 대학생 단체들이 12일 대책위를 만들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전남대와 한양대 총학생회 등 전국 30개 대학 총학생회와 민주노동당학생위원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27개 단체는 이날 중앙대에서 시국회의를 열고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저지와 검역주권 회복을 위한 전국 대학생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들은 학교식당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광우병 안전지대’ 선언운동 ▲전국 동시다발 대학생 행동의 날 ▲촛불문화제 동참 ▲각 대학별 대책위 구성을 4대 행동방점으로 정하고 시국선언문을 채택했다.

대책위는 선언문에서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걸

린 미국산 쇠고기 검역주권을 포기했고 온 국민이 정부에 대한 배신감과 광우병에 대한 공포심에 휩싸인 상황이 촛불의 함성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막고 검역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대학생들이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들은 16일 서울 보신각 등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 반대 행동을 시작한다.

한편 1천50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인터넷모임으로 구성된 ‘광우병위험 미국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 긴급대회’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에 관한 고시가 발표되는 15일을 전후해 13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정계광장에서 대규모 연속 촛불문화제를 연다. 광주, 대구, 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도 이 기간 중 매일 또는 2~3일씩 촛불문화제가 각각 열린다. /정성필기자 camus@

野 “美 관보 오역은 협상부실 입증”

“국정조사해야” ... 靑 유감 표명

야권은 12일 쇠고기 협상과 관련, 동물성 사료금지 완화조치를 담은 미국 연방관보 내용을 정부가 오역(誤譯)했다고 설명한 데 대해 “총체적 협상부실이 확인됐다”며 총공세를 펼쳤다. 특히 정부의 ‘오역과동’이 단순한 해석상의 실수라기 보다는 의도적인 은폐 또는 묵인행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FDA 보도자료가 난해한 영문도 아니고, 해석상 오류도 한 명이 아니라 동시통역이 가능할 정도로 영어실력을 인정받은 재원 2명에 의해 반복해서 일어났다는 점 때문이다.

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12일 현안브리핑에서 “정부는 이제 입이 열 개

라도 할 말이 없게 됐다”며 “처음에는 미국 식약청 보도자료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더니 결국은 영문번역을 잘못했다고 실도했다”고 비판했다. 차 대변인은 이어 “협상단은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들여오겠다고 우기자고 가서 영어공부나 다시 하고 오기 바란다”며 “대통령은 처벌적 실수를 저지른 협상단과 정문천 농수산식품부 장관을 사퇴시키고 반드시 쇠고기 재협상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림장관을 지낸 박홍수 사무총장은 이날 “단순한 해석상 실수라기 보다는 급하게 졸속 추진하다가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자난달 중순 협상과정

이 대단히 이상하고 현재 협정문과 입법예고안 사이에 다른 부분도 21곳에 달하는 만큼 국정조사를 통해 전 과정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박승훈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정부가 또 다시 국민을 속인 정황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정부가 해석을 잘못했는지 없으며 의도적인 묵인 또는 눈가리고 아웅식의 은폐행위일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한편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12일 쇠고기 협상과 관련, 동물성 사료금지 완화조치를 담은 미국 연방관보 내용을 정부가 오역한데 대해 “국민께 불필요한 오해와 심리를 끼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